낙후 해소할 철도·도로·항만…경제성만 따지면 '백년하청'

정부 예타에 발목 잡힌 전남도 내년 SOC사업 뭐가 있나

경전선 영남구간 전철화 완료
호남구간은 수년째 논의도 안돼
문대통령 공약 무안공항 활성화
정부 예산 요청·탈락 수년 반복

전남도가 내년도 국가 예산을 요청한 신규 주요 SOC사업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철도와 도로 등의 신설·확충 사업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실정을 고려한 발전 잠재력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당장의 수요와 이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혀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SOC 격차가 커지면서 결과적으로 지역 간 경제집적 기반 조성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전남도의 주요 신규 도로·철도 사업은 ▲서남해안 관광도로(완도~고흥) 건설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경전선(진주~광양) 전철화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남도 2대교 건설 등이다.

이 가운데 경전선 전철화(광주 송정~순천·광양~진주) 사업은 경전선 구간 중 유일한 단선 비전철 구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호남선 광주송정역과 경부선 삼랑진역을 연결하는 간선 철도 노선으로, 영남구간은 이미 전철화 사업이 마무리된 반면 호남 구간은 수년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일제강점기 건설(1930년) 후 90여년 동안 개량되지 않은 유일한 철도인 경전선 호남구간이 예비타당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또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중인 단선 일반철도건설사업을 전철화로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신규 예산 요청을 해둔 상태다. 순천~부산 구간은 이미 전철화가 완료됐으며, 목포~보성 구간이 전철화가 되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소요시간이 2시간대로 단축된다. 하지만, 기재부는 일반철에서 전철로 전환하면 사업비가 1702억원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타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부산시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남해안철도를 전철이 아닌 고속철도(KTX)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 사업 중 전남도가 추진중인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사업은 완도와 고흥을 이어 수려한 서남해안의 관광을 위한 것으로, 오는 2019년 사업을 추진해 2030년 완공이 목표다. 하지만, 총 사업비가 8100억원으로, 정부의 예타 대상이다.

공항·항만과 관련한 신규 사업으로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기반 구축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여수세계박람회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등이 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 400억원으로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형 항공기의 운항이 가능하도록 활주로를 기존 2800m에서 3200m로 확장하고, 계류장도 9만1000㎡ 크기에서 14만6000㎡로 확장하는 게 주요 사업이다. 또한 국제선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를 현재 1기에서 2기로 증설하는 것도 포함됐다. 하지만, 수년째 전남도가 국비 예산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내년도 예산에 실시 설계비 등 사업비 20억원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던 만큼 내년도 예산에는 포함될지 주목된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도 총 사업비가 2006억원으로, 정부의 예타 조사가 발목을 잡고 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 건립사업도 총 사업비가 759억원으로 예타 대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SOC 확충에서 소외된 전남지역에서는 SOC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 증대 없이는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정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성 보다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정책적 판단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일자리 가로막는 규제 과감히 혁신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경제는 국민의 삶이며,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고자 한다"며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달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다르다.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적어도 국민께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경제팀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달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청와대 비서관 인사…자치발전 민형배

자영업 인태연·정책조정 김영배·시민참여 정현곤

민형배 정현곤 김우영 김영배 강문대 인태연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신설한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에 인태연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실시한 청와대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비서관 후속 인선을 단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자치발전비서관에는 민형배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을 그리고 정책조정비서관에는 김영배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시민참여비서관에는 정현곤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또 사회조정비서관에는 강문대 법률사무소 로그 대표변호사, 제도개혁비서관에 김우영 전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을 발탁했다.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 후 처음 이뤄진 신임 비서관 인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친노' 성향 인사들이 다수라는 점이다.

민형배 비서관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목포고와 전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사회조정비서관으로 일했으며 광주 광산구청장을 지냈다. 부산 출신의 김영배 비서관은 서울 성북구청장을 연임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그는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행사기획비서관 등을 지냈다. 김우영 비서관은 강원 강릉 출신으로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을 거쳤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의 발탁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직접 신설을 지시해 인선에 관심이 쏠렸던 자영업비서관에 임명된 인태연 비서관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한편, 청와대는 나머지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신임 비서관들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무현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일한 바 있는 유민영 성균관대 겸임교수가 홍보기획비서관에, 이광호 전 이우학교 교장이 교육비서관 등으로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대통령 지지도 7주만에 반등…63%, 2.1%P 올라

미얼미터, 정의당 14.3%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7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0%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지난주보다 2.1%포인트 오른 63.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율은 2.9%포인트 내린 30.4%였다.

6월 둘째 주 75.9%를 기록했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61.1%까지 6주 동안 하락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일간 집계에서 58.8%로 60%선을 내줬다. 하지만, 지난달 31일부터 반등을 시작해 지난 3일에는 65.0%를 찍기도 했다.

리얼미터는 "폭염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정부의 긴급 민생대책,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롭게 창설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여론의 긍정적 평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1.2%포인트 하락한 42.8%, 자유한국당이 1.0%포인트 떨어진 17.6%를 각각 기록했다. 바른미래당은 5.8%, 민주평화당은 2.8%로 역시 소폭 하락했다.

반면 정의당은 1.8%포인트 오른 14.3%로 2주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며, 리얼미터 기준 주간집계에서 처음 한국당에 오차범위 내로 다가섰다.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10%선을 넘었고, 진보층에서 20% 초반대까지 지지율이 상승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